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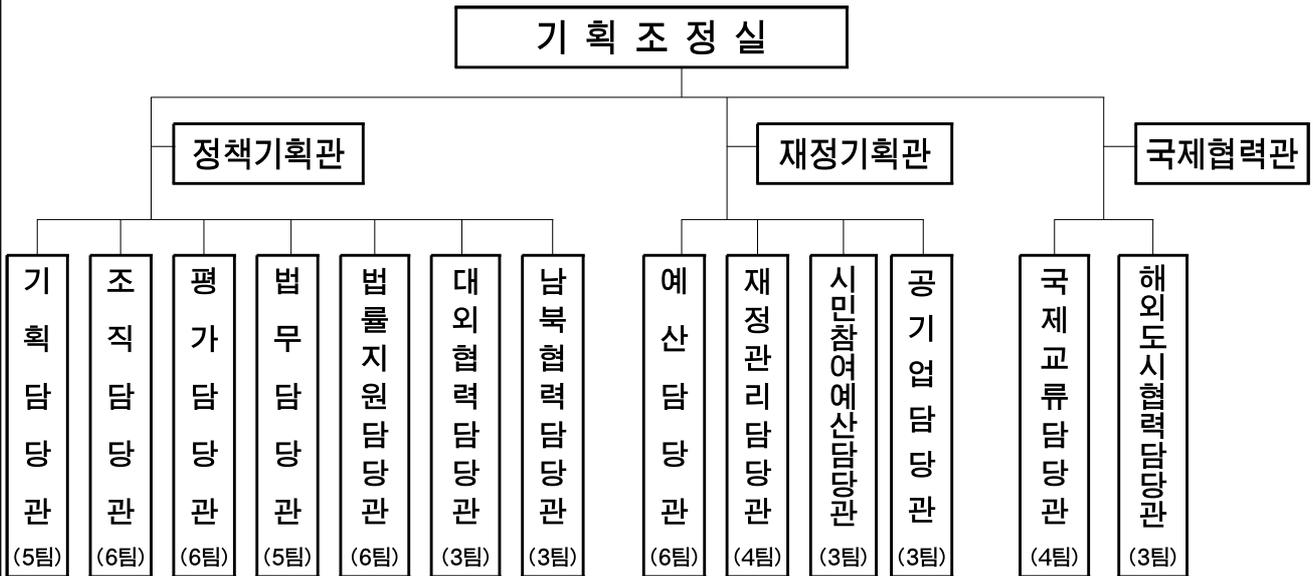
# 현안 업무 보고

2018. 9.

기 획 조 정 실

# I. 일반 현황

**조 직** 1실, 3관, 13담당관, 57팀, 1직속기관 · 1출연기관



- 직속기관 : 시립대학교(8대학 10대학원 6처)
-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1본부 6연구실 3센터)

**인 력** 311/289명(정원/현원)

(’18. 8. 28. 현재)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관리운영직
계	311 / 289 (155)	261 / 243	42 / 38	1 / 1	7 / 7
기 획 담 당 관	39 / 30 (12)	36 / 28	1 / 1		2 / 1
조 직 담 당 관	34 / 33 (18)	32 / 32	1 / 1		1 /
평 가 담 당 관	32 / 29 (20)	30 / 27	1 / 1		1 / 1
법 무 담 당 관	24 / 24 (13)	22 / 22	1 / 1		1 / 1
법률지원담당관	28 / 27 (17)	13 / 12	15 / 14		/ 1
대외협력담당관	17 / 18 (7)	13 / 15	4 / 2		/ 1
남북협력담당관	11 / 11 (5)	8 / 8	3 / 3		
예 산 담 당 관	39 / 37 (16)	38 / 36			1 / 1
재정관리담당관	18 / 17 (8)	17 / 16	1 / 1		
시민참여예산담당관	9 / 8 (7)	8 / 7	1 / 1		
공 기 업 담 당 관	17 / 15 (6)	15 / 13	2 / 2		
국 제 교 류 담 당 관	27 / 26 (16)	17 / 16	8 / 8	1 / 1	1 / 1
해외도시협력담당관	16 / 14 (10)	12 / 11	4 / 3		

※ 괄호 안은 부서별 여성공무원수

##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정현안사항 기획·조정</li> <li>○ 시의회 관련 업무, 국정감사 수감총괄, 공약총괄 관리 등</li> </ul>
조 직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민간위탁 업무</li> <li>○ 지방분권 업무 및 학술용역심의</li> </ul>
평 가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 주요사업·시책 평가</li> <li>○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li> </ul>
법 무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법규 제·개정, 규제개혁</li> <li>○ 행정심판, 소청심사 운영</li> </ul>
법률지원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총괄, 주요 시책사업 법률자문, 계약(협약) 심사</li> <li>○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및 공익 변호사단 운영 등</li> </ul>
대외협력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지자체와의 상생교류 협력 업무</li> <li>○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지자체 등 협력관련 업무 등</li> </ul>
남북협력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 기획·조정</li> <li>○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지원, 인도적 지원 사업 총괄 조정</li> </ul>
예 산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 예산집행 관리 총괄</li> <li>○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 재정투융자기금 운용</li> </ul>
재정관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市·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 기금운용 총괄</li> <li>○ 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국고보조금 총괄 등</li> </ul>
시 민 참 여 예 산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관리</li> <li>○ 예산학교,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li> </ul>
공 기 업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출연기관 설립지원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li> <li>○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li> </ul>
국제교류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외교 계획 수립, 국제교류 업무 총괄 조정</li> <li>○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협력 및 국제의전 지원</li> </ul>
해 외 도 시 협 력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정책 해외공유 전략수립 및 조정·지원 총괄</li> <li>○ 국제기구 유치·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회의 참가 등</li> </ul>

## 예산 총 규모 : 1조 3,960억원

###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최종(사업수)	2018년(사업수)	증 감
합 계	2,438,845 (78)	1,395,971 (78)	△1,042,874
일반회계	927,561 (62)	555,571 (61)	△371,990
도시개발특별회계	26,920 (-)	40,674 (-)	13,754
기 금	1,484,364 (16)	799,726 (17)	△684,638

### ○ 일반회계 : 총 5,556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최종(사업수)	2018년(사업수)	증 감
합 계	927,561 (61)	555,571 (62)	△371,990
기획담당관	1,035 (3)	1,229 (3)	194
조직담당관	98,699 (10)	85,139 (12)	△13,560
평가담당관	1,727 (7)	2,638 (6)	911
법무담당관	555 (3)	661 (3)	106
법률지원담당관	4,616 (2)	5,824 (2)	1,208
대외협력담당관	3,973 (7)	4,356 (7)	383
예산담당관	186,863 (3)	259,820 (3)	72,957
재정관리담당관	619,345 (6)	183,660 (5)	△435,685
시민참여예산담당관	464 (2)	630 (3)	166
공기업담당관	789 (4)	697 (4)	△92
국제교류담당관	4,051 (7)	5,542 (7)	1,491
해외도시협력담당관	5,444 (7)	5,374 (7)	△70

### ○ 도시개발특별회계 : 총 407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최종(사업수)	2018년(사업수)	증 감
예산담당관	26,920 (-)	40,674 (-)	13,754

### ○ 기금 : 총 7,995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최종(사업수)	2018년(사업수)	증 감
합 계	1,484,364 (16)	799,726 (17)	△684,638
재정투융자기금	727,603 (-)	591,495 (-)	△136,108
감채기금	727,463 (-)	183,161 (-)	△544,302
남북교류협력기금	11,345 (1)	10,875 (1)	△470
대외협력기금	12,225 (15)	13,281 (16)	1,056
지역개발기금	5,728 (-)	914 (-)	△4,814

※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

## II. 정책 목표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

민 선 7 기  
시 정 성 과  
창 출  
지 원

시 민 권 익  
향 상 을  
위 한  
제 도 개 선

실 효 성 있 는  
예 산 · 재 정  
관 리 체 계  
확 립

교 류 협 력 에  
기 반 한  
서울의 위상  
제 고

# Ⅲ. 기획조정실 현안업무

## 1.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

- ① 민선7기 성공적 시정운영을 위한 4개년 계획 수립 추진
- ②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및 후속조치 계획
- ③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
- ④ 시정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추진

##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①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통한 시민 권익구제 강화
- ② 대시민 법률 서비스 활성화
- ③ 소송수행 전문성 및 법률지원 강화

## 3.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 ① '19년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로 재정건전성 제고
- ② 지방보조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③ '19년도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추진

## 4. 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의 위상 제고

- ① 남북 도시교류 추진 선도를 위한 교류기반 확대
- ② 도시외교 및 정책수출 추진체계 개선 연구용역 추진
- ③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한 대외협력기금(국제계정) 활성화

# 1.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

① 민선7기 성공적 시정운영을 위한 4개년 계획 수립 추진

②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및 후속조치 계획

③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

④ 시정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추진

# 1 민선7기 성공적 시정운영을 위한 4개년 계획 수립 추진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4개년간의 서울시정 기본계획을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더 깊은 변화 위원회」 자문을 받아 수립

## □ 추진방향

- 공약사항을 포함하여 시민체감도가 높고 시정방향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지표 제시
- 소관 실·본부·국이 전문가, 시민그룹 등으로 구성된 「더 깊은 변화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민관 참여형 계획을 수립해 대외 발표

※ 더 깊은 변화 위원회 구성 : 전체위원회(56명), 기획위원회 및 6개 분과위원회

## □ 계획구성(안)

**비 전** :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정책목표** : ① 함께 성장하는 미래서울, ②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서울  
③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서울 ④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서울  
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서울

**추진과제** : 공약사업, 계속사업 중 중요사업, 신규사업 중심으로 180여개 발굴

**투자계획** : 4년간 투자에 대한 분야별 투자수요 및 연차별 계획

## □ 추진경과

- 전체위원회(총2회) : 7. 4., 8.28.
- 분과위원회 운영(총74회) : 7. 5.~8.14.  
- 분과위원과 실·본부·국이 협업하여 사업계획 수립
- 기획위원회 운영(총7회) : 7. 5.~8.21.

## □ 향후 일정

- 핵심과제 중심 대시민 발표 : 9.13.(목)  
- 발표내용 : 4개년 계획 체계(비전·정책목표 등), 핵심과제(25개) 등
- 민선7기 4개년 계획(2018~2022) 발간 : 10월 중

## 2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및 후속조치 계획

시민과 한달간의 동고동락('18. 7.22.~'18. 8.19.)을 계기로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8.19.(일)에 발표한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적극 추진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울 지역간 격차의 근원은 40년간 지속된 강남위주의 개발정책으로 현재의 서울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조성
  - 2호선을 비롯한 지하철, 테헤란로 등 주요 도로 등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영동·잠실지구 등 주택공급 및 상업지역 집중 육성
  - 강북 명문고 및 공공기관 이전, 문화체육시설 등 각종 유인시설로 인구유입 가속화

⇒ ◆ 서울 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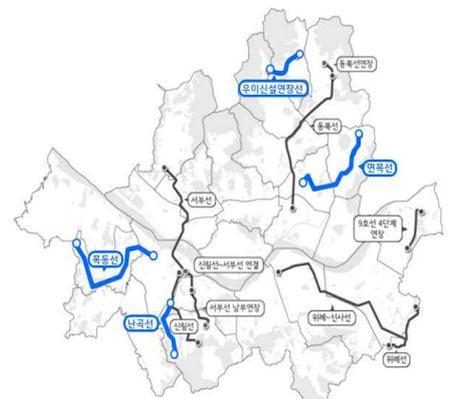
### □ 추진전략

- 자치구 단위의 국소적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 차원의 전면적 대수술 필요
- 도시개발 및 관리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그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전략'으로 재편

⇒ ◆ 시의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패키지로 비강남권에 집중 투입

### □ 주요 내용

- (교통) 비강남권 4개 철도노선 재정사업화 및 공유차량 우선 주차구역 확대
  - 그간 지체된 면목·우이신설연장·목동·난곡선 등 4개 노선 재정투입으로 조기착공('22년)
  - 공유차량 활성화를 위해 나눔카 우선주차구역 확대 및 여유차로 활용 주차장 설치



- (주거환경) **빈집 활용 임대주택공급 및 주민 자율 소규모 정비 활성화**
  - 장기 방치 빈집 1,000호 매입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4,000호 공급
  - 집수리, 리모델링,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정비기법 활용
- (지역경제) 주민주체 **'선순환 경제생태계' 구축 및 마을단위 '생활상권' 확대**
  - 도시재생, 집수리 시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도록 해 지역내 경제활성화 유도
  - 대기업에 점령된 지역상권 부활을 위해 주민 근린생활권내 전통시장·소상점가 등 지원
- (돌봄·교육·문화) **비강남권 학교지원 강화 및 돌봄·문화시설 집중 설치**
  - 비강남권 학교 활성화를 위해 인근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진로프로그램 운영
  - 비강남권에 열린육아방, 키움센터 등 돌봄시설 집중배치 및 청소년·문화시설 건립
- (공공기관 이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재개발원 등 **공공기관 강북 이전검토**
  -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TF)를 통해 연내 대상기관을 확정해 발표 예정
- (추진 체계)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재정 투자 및 조직 체계 정비**
  - 지역 불균형을 고려한 투자원칙 마련 및 1조원 규모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 전담조직 설치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및 지역균형 발전계획 수립 등 시정전반의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향후 일정

- **분야별 사업계획 구체화·확정 및 연내 후속 발표 추진**
  - (구체화) 격주 단위 부시장단 연석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실행계획 구체화
  - (발 표) 매월 시장 보고회 등을 통해 실행계획 확정후 분야별로 순차적 발표
-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및 '19년 예산 반영**
  - (근거마련) 「서울시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
  - (예 산) 공유재산관리계획·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 후 '19년 예산 반영

### 3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

지방정부 핵심 역량 집중으로 국가 정책화를 촉구하고 서울시 핵심과제별 선제적 대응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구현

#### □ 추진 방향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 주도의 지방분권 중점과제 추진
- 시·도 지방분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대응 강화로 지방분권 실현 촉진
- “내 삶에 꼭 필요한 지방분권”을 실생활 사례로 홍보, 시민 공감대 조성

#### □ 중앙정부 추진 동향

- 정부, 합의문 형태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시행 발표(‘18.6.21.)
  - ’19년 서울·세종·제주에 자치경찰 시범 도입 및 대통령 임기 내 전국 도입
-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최종 심의·의결(‘18.8.24)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자치조직권 확대, 주민주권 강화, 지방의회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 등 5대 핵심전략 33개 세부과제로 구성
- 정부, ‘지방이양일괄법’ 입법예고(‘18.8.2.~9.11.), 국회 제출 예정(‘18.9.)
  - 이양 국가사무(518건) : 19개 중앙부처, 77개 법률, 12개 상임위 연계
- 행안부,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관계법령 제·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18.9.)

## □ 중점 과제별 우리시 대응 전략

- 민선7기 차질 없는 조직개편을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지속 요구
  - 행정수요 대비 조직설계에 필요한 3급이상 기구 설치·운영 자율권 보장
  - 부단체장 설치·운영의 탄력성 확대를 통한 과도한 통솔범위 해소
  - '19.1월 조직개편 일정 감안하여 행안부에 '18.9월중 대통령령 개정 요구
- 우리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시범 도입·운영을 위한 준비 철저
  - 지방경찰청 이하 조직은 자치경찰로 이관, 중립성 확보된 경찰위원회를 통한 통제
  - 원칙은 자치경찰 사무, 자치경찰이 수사권 보유, 재정분권과 연계하여 운영재원 확보
  - 市, 자치경찰팀 신설('18.8.), 국회 (가칭)자치경찰법 논의시('18.9~) 선제적 대응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관련 행·재정 지원 병행 및 사무이양 지속 건의
  - 이양에 따른 소요인력·재정 등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계획 명문화
  - 임금체불 관리·감독권, 중앙의 과도한 규제 등 추가 이양사무 발굴·건의
- 불균등한 세입구조(8:2) 개편 및 지방 자주재정권 확대 건의
  - 국세-지방세 6:4 실현에 대한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이 담기도록 지속 요구
  - 지역 간 재정균형 위해 지자체 참여·협의를 통한 재정조정 방안 마련

## □ 향후 일정

-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회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와 공동대응(대정부·국회 건의)
- 자치분권 및 자치경찰 토론회('18.10.) 개최 등 시민공감대 확산

## 4 시정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추진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여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성 확산

### □ 평가 개요

- **근 거**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9조(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 **대 상** :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이행계획**(’17년~’18년 실적분)
- **기 간** : ’18.11월 ~ ’19. 6월 / ※ 조례에 따라 2년마다 실시
- **평가방법** : 서울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으로 평가·분석
  - (지 표) 환경·사회문화·경제 분야, 총 30개 지표(총 에너지소비량 등) 달성도 평가
  - (이행계획) 328개 세부사업별 목표달성도 점검
- **결과활용** : 보고서 발간 및 **소관 실·국 공유, 홍보 콘텐츠 제작·전파**

#### 《 市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



- ▶ **지속가능발전** : 지속가능성에 기초해 ‘환경보전, 사회통합, 경제성장’ 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 ▶ **목표 수립**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우리시가 달성해야 하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목표
  - 서울 SDGs 2030 : 서울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 **지표·이행계획 수립** :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
  - 지 표 : 지속가능성 달성 현황 및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시정 전반의 방향
  - 이행계획 : 목표 및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 ▶ **지속가능성보고서** :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및 공유

## □ 추진계획

### ① 「지표 평가 및 이행계획 성과 점검」으로 시정 지속가능성 제고

#### ○ 시민·전문가와 함께하는 지표 평가 및 이행계획 성과점검 실시

- 관련 실·국 사전 안내 및 지표 평가·이행계획 점검 추진('18.11~'19.2)
- '엠보팅'을 활용한 시민 지표 평가, 전문가 여론조사 등 실시('18.11~12)

#### 《 '18년 학술토론회 개최(안) 》

- ▶ 시·장소 : '18. 11월 중(예정),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 참 석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학계, 산업계, 시민 등 100 여명
- ▶ 주요내용
  - 지속가능성 평가의 시민·전문가 참여방안 제시
  - 제2차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는 우선 정책과제 모색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협업하여 「市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 위원회 내에 환경·사회문화·경제 분야를 통합한 T/F 구성('19.3~6)
- 평가·점검결과, 향후과제, 개선방안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발간('19.7)

### ② 「평가 결과의 활용·공유」로 시정 지속가능성 확산

#### ○ 실·국, 자치구에 결과 공유 및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20~'24)에 활용

#### ○ 홍보콘텐츠로 제작·전파하여 시민 공감대 확산

- 주요지표에 대한 연도별 변화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하고, 평가결과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동영상으로 제작('19.7~10)
- 홍보콘텐츠를 市 홈페이지 등 주요 사이트에 게재('19.11~12)
- 인재개발원, 평생학습포털 등에 학습자료로 공유('19.11~12)

## □ 향후 일정

- 학술토론회 개최, 지표·이행계획 평가 : '18.11 ~ '19. 2월
- 위원회 T/F 구성,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 '19. 3 ~ 6월
-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홍보콘텐츠 제작·전파 : '19. 7 ~ 12

##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①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통한 시민 권익구제 강화

② 대시민 법률 서비스 활성화

③ 소송수행 전문성 및 법률지원 강화

# 1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통한 시민 권익구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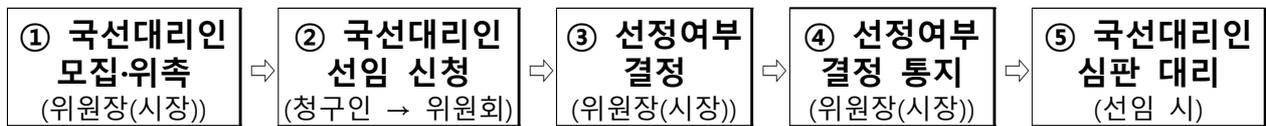
시민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경제력이 없는 청구인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시행하고자 함.

##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 근거 : 「행정심판법」 제18조의2(국선대리인)
- 지원대상 :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
- 선정 :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위원장(시장) 위임〕
- 시행일 : '18. 11. 1.

※ 현재 「행정심판법 시행령」 및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진행 중

## □ 추진절차



## □ 주요 내용(「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구분	세부내용
국선대리인 위촉 등	- 위촉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시장) - 자격 : 변호사, 공익법무관, 다른 법률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 - 임기 : 2년, 1회 연임
지원요건	-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상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대상자
보수	- 1건당 50만원 이하

## □ 향후 일정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운영을 위한 '19년도 예산 확보
  - '18년도 상반기 관련사건 수 및 타 국선대리인 사건 평균 보수 등 고려하여 편성  
※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건 건당 평균 보수 195천원('18년도 국회 법사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국선대리인 제도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관련 표준(안) 시달(국민권익위원회) : '18. 10.
  - 국선대리인 모집, 명부 작성·관리 및 보수산정기준 등 세부(안) 마련(市) : '18. 10.
  - 국선대리인 법령 및 세부(안)에 따라 제도 시행 : '18. 11. 1.

## 참고자료

### □ 「행정심판법」 제18조의2('18. 11. 1. 시행)

**제18조의2(국선대리인)** ①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보수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현재 입법예고('18. 7. 20. ~ 8. 29.) 완료 후 개정 추진 중('18. 11. 1. 시행 예정)

**제16조의2(국선대리인의 위촉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른 변호사
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공익법무관
3.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② 국선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 모집, 국선대리인 명부의 작성·관리 등 제1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3(국선대리인의 지원 요건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의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란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②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 내용, 청구인의 주장 등에 비추어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 2 대시민 법률 서비스 활성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이 생활현장에서 신속하게 법률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확립

### □ 추진 방향

- 생활 주변에서 편리하게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 시민 생활속에서 발생한 이웃간 분쟁을 자발적·합리적으로 조정 유도

### □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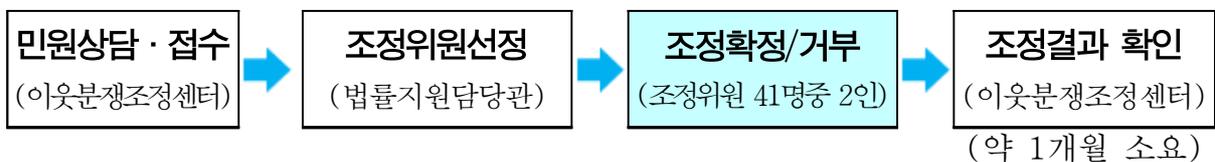
#### ○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 시민이 가까운 생활공간에서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洞마다 전담 변호사 배치**
- 모든 동(424개)에 마을변호사 808명을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법률상담**
- 2018년도 8월말 추진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방문 상담	전화 상담	동별 평균
계	10,118	8,192	1,926	24
월평균	1,265	1,024	241	3.0

#### ○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 이웃간 분쟁을 주민 스스로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공적 완충장치**
- 상담원(3명)이 분쟁접수 후 조정전문가(41명) 중 2명씩 배정되어 조정



- 2018년도 8월말 추진실적 (단위 : 건)

총상담건수 (A+B)	조정 실시(A)				조정 미실시(B)			
	계	합의	진행	결렬	계	이관	상담종결	거부
965	57	43	10	4	908	1	830	77

## □ 주요 추진사항

### ① '서울시 마을변호사' 홍보를 강화하여 활성화 운영

- 시민 생활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 반상회 자료, 아파트·상가 관리사무소, 시내 전광판, 지하철 광고판 등
  - 기타 시민왕래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은 자치구를 통해서 홍보물 배포
- 마을변호사 인지도 및 자긍심 제고 지속 추진
  - 마을변호사 활동 미담사례, 법률상담 사례를 발굴하여 배포
  - 마을변호사 자긍심 고취 및 활동 우수변호사 표창
- 법률상담 중심에서 저소득층 법률구조(소송대리 등) 확대 추진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하여 중위소득 125% 이하 시민 법률구조 지원
  - 민사·가사 사건, 행정심판, 임금 및 퇴직금 관련사건, 양육권 사건 등

### ② '이웃분쟁조정센터' 전문성 강화

- 건축물 누수, 소음, 동물분야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참여 확대
  - 조정위원 인력풀을 건축, 소음, 반려견 등 전문분야 확대 운영
  - 분쟁의 성격에 따라 누수, 반려동물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분쟁해소 지원
- 필요시 현장방문, 현장조정을 통해서 찾아가는 조정센터 운영
  - 조정위원들이 분쟁현장을 방문하여 분쟁내용을 파악 합리적 조정지원
  - 동주민센터 등 갈등지역 공공장소를 활용한 현장조정으로 주민불편 해소
- 자치구도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 강화
  - 성동구는 동별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를 위해 주민 교육 등 준비중

## □ 향후 일정

-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간담회 개최 계획 수립 : '18. 9월
- '이웃분쟁조정센터'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 '18. 9월

### 3 소송수행 전문성 및 법률지원 강화

서울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시 또는 정책 수립·집행시 전문적 법률지원을 통하여 법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 추진 방향

- 법률전문관을 통해 소송수행의 체계화, 전문화를 통해 법치시정 추진
- 시정 모든 영역의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

#### □ 사업 개요

##### ① 법률전문관(변호사) 직접 소송수행으로 전문성 강화

- 직접 소송업무 진행으로 차질 없는 소송수행
  - 서울시 소속 변호사가 서면작성, 변론출석 등 소송수행자 역할 수행
  - 사업부서 업무담당자를 공동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사실확인 및 관련자료 지원
  - '18년 소송수행 현황('18.7월말) : 889건(민사소송 496, 행정소송 393건)
- 외부대리인 선임비율 지속적 감소
  - 법적으로 외부변호사를 선임토록 규정된 사건이외는 내부에서 직접수행
  - '18년 신규사건 262건 중 212건 내부 법률전문가 수행토록 하여 예산절감

※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단위 : 건, %)

구 분	수 행 건 수			판 결 확 정					진 행
	계	이 월	신 소	계	승 소	승소율(%)	패 소	기타	
2018.7월.	889	627	262	259	159	67.1	78	22	630
2017년	1,041	525	516	414	281	77.0	84	49	627
2016년	984	586	398	459	290	72.0	113	56	525
2015년	1,076	621	455	490	287	77.8	82	121	586

\* 승소기준 : 소취하 등을 포함하여 소가기준 50% 이상 일부승소 포함 (소송사무처리 규칙)

\* 기 타 : 답변서 제출 전 소취하, 조정, 이송 등

## ② 다양한 분야 법률지원 강화를 통해 행정 신뢰성 제고

- **시정현안에 대한 정확한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을 통해 법치시정 지원**
  - 시정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책수립 단계부터 사전 법률지원
  -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원활한 시정운영
  - 2018년 8월말 **법률자문 실적** : 617건(내부자문 480, 외부자문 137)
    - ※ 내부자문 : 긴급한 검토사항, 업무상 적법절차 준수, 장기검토 및 체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내부 변호사에 의한 검토
    - ※ 외부자문 : 다양한 이해당사자 대립으로 외부의 객관적 시각이 필요한 경우, 특수분야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안을 외부 변호사(복수)에 의뢰
- **다양한 시정현안 TF 참여로 신속하고 지속적인 법률지원**
  - 신규 사업추진,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추진, 기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주요 계약과 협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강화**
  - 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제3자 제안 공고문 포함), 신규 및 변경 협약, ② 민간위탁사업 신규 및 10억원 이상 재위탁·재계약사업,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약, ④ 서울시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 사전 심사강화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 계약업무의 리스크를 최소화

## □ 향후 일정

- **체계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지원 강화(계속)**
  - 소송문서·소송기일·소송통계 관리 등을 통한 체계적인 송무 관리
  - 다양하고 복잡한 사업의 법규해석, 신규 사업추진시 법률검토
- **계약서, 협약서를 작성하는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 지원(계속)**
  - 기 체결된 계약·협약의 위험성 최소화 위한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

### 3.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① '19년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로 재정건전성 제고

---

② 지방보조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③ '19년도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추진

---

# 1 '19년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로 재정건전성 제고

시민안전·복지 등 역점 시책사업을 위한 국비 추가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차별적용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

## □ 추진배경

- 보육지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매칭 시비부담 증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적 보조비율 적용으로 市 재정부담 가중
  - 매칭시비 2조 2,567억원('11년) → 4조 1,466억원('18년) <1조 8,899억원↑>
  - 차별보조에 따른 추가부담 : 128개 사업 1조 3,920억원('18년 기준)

## □ 주요 추진사항

- 기획재정부(재정정책자문회의, '18.3)· 행정안전부('18.6)에 기준보조율 차별개선 건의
- 중앙부처 및 기재부 방문, 국비 지원의 타당성·시급성 설명
  - 국토교통부 예산협의회(4.30),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5.9)
  - 도시철도 무임수송(4회),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3회) 등 방문 설명

## □ 향후 일정

- 주요 핵심사업의 국비 추가확보 위해 실·본부·국 협력 체계 유지
  - 정부예산(안) 국회제출에 따른 국비 반영 내역 모니터링 추진(9월)
  - 국비확보 T/F 운영을 통해 추진상황 공유 및 공동 대응
- 市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국회 대상 설명 추진
  - 사업별 관심 국회의원 대상으로 지원 협조 요청(서울지역 및 소관 상임위 등)
  - 상임위/예결위 예산(안) 심사시 국회의원·보좌관 방문 설명 및 간담회 개최

### ※ 정부 예산편성 일정

: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9.3), 정부예산 심의·확정(12.2, 국회)

## 2 지방보조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19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 및 효과성 제고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요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 구성 : 당연직 포함 15명 이내 (위촉직은 전문가 인력풀 483명 활용)
- 기능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보조사업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선정 등

### □ 주요 추진사항

- '17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전액시비사업 778개 1조 6,131억원) : '18년 6월
  - 1차 평가(실·본부·국) :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20%)
  - 2차 평가(위원회) : 미흡사업(20%, 151개) 중 지속 26개(300억원), 축소 10개(123억원), 폐지 115개(428억원)
- '18년 지방보조사업 추경편성안(111건, 1조 9,609억원) 심의 : '18년 8월

### □ '19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 대상 : '19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 내용 : 지방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심의
  - 지방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자원분담 기준 등
- 심의방법 : 집중심의·일괄심의로 구분하여 심의 내실화
  - 집중심의 : 전액 시비 신규사업,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
  - 일괄심의 : 국고보조사업(국·시비 매칭사업 포함), 공공단체보조 등
- 심의결과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예산편성 시 반영)

### □ 향후 일정

- '19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총 4회) : '18년 9월

### 3 '19년도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추진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심사·선정하여 예산에 편성
- 운영규모 : **655억원**(시정분야 450, 지역분야 205)

구 분(추진부서)	운영규모	사업내용	심사주체	
시정 분야 (450억)	시정참여형 (기획조정실)	350억원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 도시 문제해결 사업	市 참여예산위원회
	시정협치형 (서울혁신기획관)	100억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집행 등 전과정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지역 분야 (205억)	지역참여형 (기획조정실)	70억원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14개구, 구별 평균 5억원)	區 참여예산위원회
	구단위계획형 (서울혁신기획관)	110억원	구 지역사회혁신계획에 참여예산사업 통합추진 시 인센티브 부여(11개구, 구별 평균 10억원)	區 민관협치회의
	동단위계획형 (서울혁신기획관)	25억원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단 등 발굴 사업(81개동, 동별 3천만원)	동회의 등

※ 구단위계획형은 '19년 15개구 계획이었으나 심사주체 통합, 제도정비 등의 사유로 11개구 신청  
 ※ 동단위계획형은 90개동 계획이었으나 81개동 신청

#### □ 주요 추진사항

- 시정분야(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 사업공모 : 3,288건 9,798억원(※ 지역분야로 이관 : 1,469건, 3,265억원)
  -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 추진 : 현장확인 등 숙의 심사 121회 1,330명 참여
  - 시민투표 : **엠보팅 시스템**으로 투표(10개)하여 **450억 사업 선정, 총회(9.1) 승인**
    - ▶ 시민투표 대상사업 : 148건 553억(시정참여형 107건 447억, 시정협치형 41건 106억)
- 지역분야(지역참여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서 심사·선정, 市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승인
  - 지역참여형 14개구 91건, 구단위계획형 11개구 176건, 동단위계획형 81동 361건 사업 선정

#### □ 향후 일정

- '19년 시민참여예산 편성 : '18. 9~10월
- 서울시 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8. 11월

## 4. 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의 위상 제고

① 남북 도시교류 추진 선도를 위한 교류기반 확대

---

② 도시외교 및 정책수출 추진체계 개선 연구용역 추진

---

③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한 대외협력기금(국제계정) 활성화

---

# 1 남북 도시교류 추진 선도를 위한 교류기반 확대

대내 남북교류 추진기반 및 대외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서울-평양 도시교류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및 남북관계 변화에 적극 대응

## □ 추진배경 및 동향

- 4.27 판문점선언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북미관계 등의 변수는 있으나, 정부 중심에서 지자체·민간으로 교류의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고려하되, 여건 조성 시 선도적으로 도시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지속

## □ 주요 추진사항

- 서울-평양 도시교류 본격 추진을 위한 **다방면의 대북 소통채널 구축**
  - 경평축구 및 제100회 전국체전 공동개최 등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
  - 대북교류 민간단체 등을 활용한 북측 관련 기구와의 직·간접 접촉
- **남북교류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민간교류 지원 및 시민참여 행사 개최
  - 판문점선언 이후 민간교류 첫 사례인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지원(8.11)
    - ※ 참여단체 : 한국노총, 민주노총,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 북한 결핵 및 보건의료 심포지움 개최(서북병원 주관, 8.23)
  - 서울시립대-평양과학기술대(총장 전유택) 업무협약 체결(8.23)
  - 경평축구 공감대 확산을 위한 자료 전시회(서울역사박물관 주관, 9.18~11.11)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재정 등 추진체계 마련**
  - 남북교류협력 전담조직 확대 : 남북협력추진단 신설(11.1.字 예정)
    - ※ (현재) 남북협력담당관(3팀) → (확대) 남북협력추진단(2담당관 6팀)
  - 안정적·장기적 사업추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확충

## □ 향후 일정

- 국제사회 대북제재 완화·해제 대비, 경제 및 도시 인프라 협력 추진 준비
  - 포럼, 협의체 구성·운영 및 현지 조사 등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9월~)
-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한 남북 신뢰 제고, 민·관 협업을 통한 역량 강화

## 2

# 도시외교 및 정책수출 추진체계 개선 연구용역 추진

도시외교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정책수출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도시외교 및 정책수출 수요 급증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필요
  - 자매우호도시 증가(62개), 우수정책 해외공유 수요 증가(30개국 42개도시, 60건)
-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도시외교 전담조직의 운영 필요성** 대두
  - 기존 행정조직으로는 전문성, 연속성 한계로 효율적 전담조직 필요

### 국제교류·정책수출 추진체계 개선 연구용역 개요

- 용역기간 : '18. 5.18. ~ 9. 5. (소요예산 : 50백만원)
- 용역기관 : 한국행정학회
- 주요내용 : 국제교류·정책수출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검토
- 전담기구 주요기능
  - 국제회의 개최와 도시외교 네트워크 구축
    - 동북아 시장포럼 개최, 해외 유력인사 초청, 국제교류 행사 집행
  - 서울시 우수정책 마케팅 및 해외 수출사업 추진
    - 해외도시 정책 컨설팅 및 컨소시엄 구성, 입찰 등을 통한 해외진출
  - 국제연수, 글로벌 시민 교육 프로그램 및 민간 협력사업 추진
    - 서울 청년 해외 인턴십 지원, 자매도시 초청 한국어 연수 및 정책시찰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글로벌 문화 시민강좌 운영 등

### 향후 일정

- 용역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 '19년

### 3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한 대외협력기금(국제계정) 활성화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의 2018년도 운용 활성화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 □ 기금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기금재원 :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 기금용도
  - 외국 지방도시와의 교류협력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 기금현황 : **5,945백만원**(사업비 2,736백만원, 예치금 3,209백만원)

#### □ 주요 추진사항

- 라오스 댐 붕괴 발생피해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 사업
  - 피해현황 : '18. 7. 23(월), 라오스 아프타주 수력발전소 보조댐 붕괴로 사망 34명, 실종 97명, 이재민 7,000여명 발생('18.8.18. 기준)
  - 지원내용 : 주한 라오스 대사를 통해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 기금 5만불 (약 56백만원) 현금 지원('18.8.13.)
- 서울형 도시교통 도입을 위한 필리핀 세부시 예비 타당성조사 사업
  - 사업배경 : 세부시가 서울시 교통시스템 도입을 요청
    - ※ 세부시 - 서울시 교통본부간 MOU 체결 ('18.2월)
  - 사업기간 : '18. 8월 ~ 12월
  - 사업내용 : 시내·시외버스 환승센터 및 터미널 구축, 대중교통 통합요금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 총사업비 : 231백만원(서울시(100백만원), 세부시(31백만원), 민간기업(100백만원))
    - ※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18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영계획 변경 의결 ('18.8.9.)

## 《 2018년도 기금사업 : 총 9개 사업 》

-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747백만원, 서울시립대)
  - 사업개요 : 도시행정 석사과정을 운영하여 서울시의 도시행정모델 홍보 및 전파
  - 사업내용 : 매년 20명의 해외 공무원 초청, 학위과정 운영
-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465백만원, 인재개발원)
  - 사업개요 : 도시정책 연수를 통하여 서울시 우수정책 전파 및 정책수출의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14개 과정 195명 연수 (과정당 7박 8일)
- **해외 철도관계자 초청 교육** (69백만원, 도시기반시설본부)
  - 사업개요 : 도시철도 교육을 통해 정책 홍보 및 국내기업 해외진출 여건 조성
  - 사업내용 : 연 2회 20명 연수 (과정당 7박8일)
-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지원** (20백만원, 문화정책과)
  - 사업개요 : 서울문화정보센터의 물품지원을 통해 양 도시 간 우호 협력 증진
  - 사업내용 : 울란바타르시가 지원요청하는 물품 구매 및 무상 기증
-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 (70백만원, 보건의료정책과)
  - 사업개요 : 개도국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선진 보건의료 지식 전수
  - 사업내용 : 개도국 의료인 10명 내외 초청 및 연수
-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 (670백만원,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개요 : 서울시 상수도 기술력의 해외 전파를 통한 해외진출의 기반 구축
  - 사업내용 : 페루 찬차마요시 정수장 및 취수장 시설 개선
- **개도국 소방안전인프라 구축(불용소방차 지원사업)** (90백만원, 소방재난본부)
  - 사업개요 : 개도국 안전인프라 구축 지원 및 인도주의 실천
  - 사업내용 : 필리핀, 페루 등 개도국에 소방장비 지원 및 소방인력 초청교육
- **서울형 도시교통 도입을 위한 필리핀 세부시 예비 타당성 조사** (100백만원, 교통정책과)
  - 사업개요 : 필리핀 대중교통 개편사업 추진을 통한 우리시 교통정책의 진출성과 창출
  - 사업내용 : 세부시 터미널 및 자동요금 징수시스템 등의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 (500백만원, 국제교류담당관)
  - 사업개요 : 외국 지방정부에 긴급 구호자금 등 지원을 통해 상호 우호협력 증진
  - 사업내용 : 지진, 태풍 등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구호자금 및 구호물자 등 지원

### 향후 일정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재원 확충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 확대**
  - 지속적인 수입금 확충을 통해 2020년까지 100억원 조성('18년 : 59억원)